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5.24)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에서는
기업들의 ESG 관련 최대 현안인
EU 공급망 실사 대응 및 ESG 평가시장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

첫 번째 안건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입니다.

EU에서는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침에 따르면 EU 역내기업 뿐 아니라, 역외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며,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EU의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청기업 단위의 패키지¹⁾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對EU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들이 스스로 ESG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 원청기업 - 1차 협력사 - 2차 협력사

하청기업들이 복수의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중복실사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실사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문가를 투입하여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과 실무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²⁾ 등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인력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간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산업단위로 확대·개편하는 등
원청·하청기업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

두 번째 안건은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입니다.

ESG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 이해상충 우려 등은
국내외 평가시장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평가의 신뢰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국내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동 가이드스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
평가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2) 채용 설명회 개최, 기업·인력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

평가시장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9.1일부터
자율규제의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가이드스 활용도·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말씀종료)